

안전인들 교류와 활동 확대에 앞장

새 정부 정책에 안전 분야 반영 위해 적극 노력

박재학 제14대 한국안전학회 회장 /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한국안전학회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다. 1986년 국내 최초의 안전 관련 학회로 창설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회원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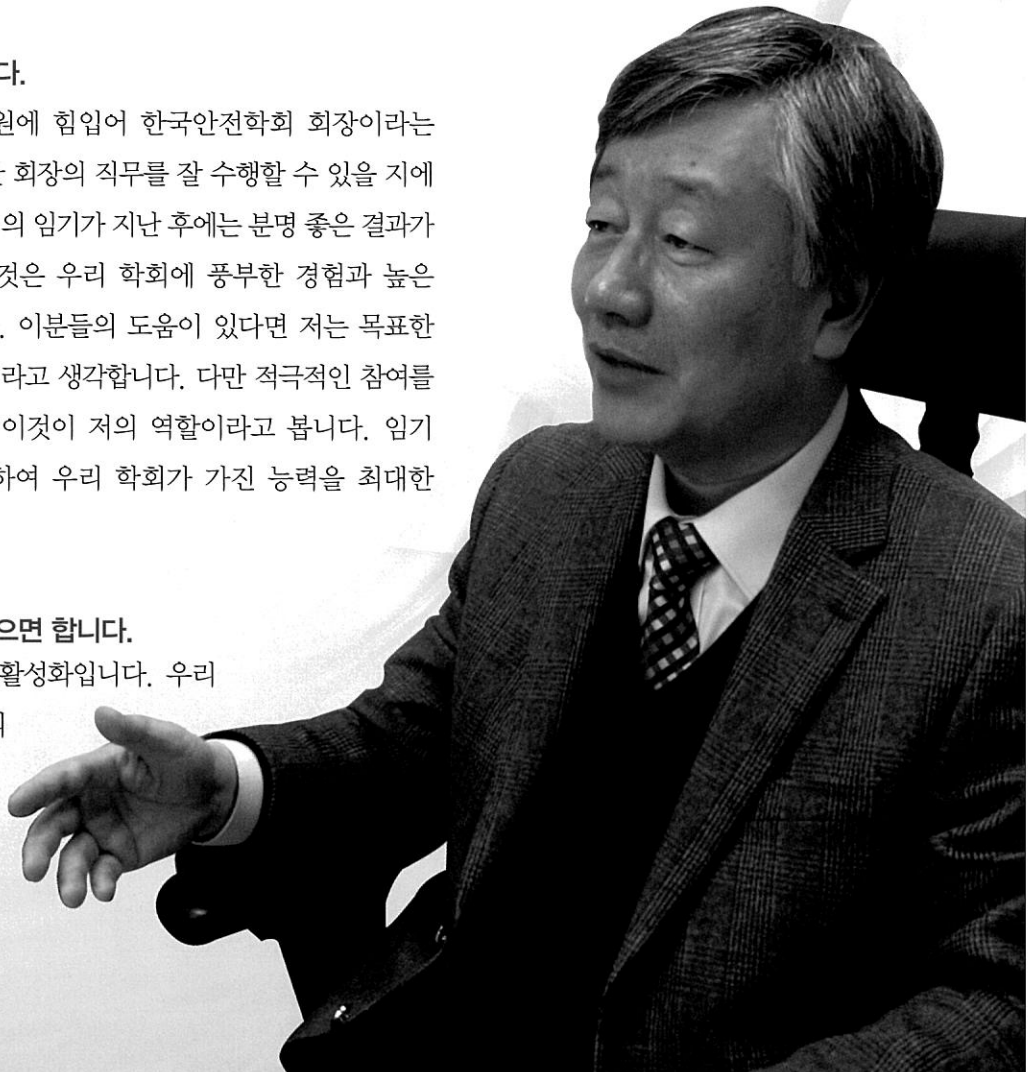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안전학회는 그간 수많은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는 한편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안전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런 큰 족적을 남겨 온 한국안전학회가 최근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제14대 한국안전학회 박재학 회장을 만나 향후 학회 운영 계획과 재해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신임 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한국안전학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막중한 회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 큼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저의 임기가 지난 후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믿음만은 확고합니다. 그것은 우리 학회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학식을 갖추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저는 목표한 모든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바로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임기 동안 회원분들의 원활한 교류를 유도하여 우리 학회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학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은 부문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학회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등 10개의 부문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부문이 독립된 학회처럼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우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부문이사로 모셔 조직을 구성하고, 부문위원회 주관으로 회의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문이사에 현장 안전전문가도 대거 포함시켜, 부문활동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를 늦게 시작한 만큼 안전의 발달 역시 늦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의 안전 선진국들이 과거에 겪었던 다양한 사고 경험을 충분히 겪지 않아 아직 사회적 학습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비로소 교량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1830년에 700명이 서있던 다리가 끊어지는 사고를 통해 교량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1860년에서 1870년 사이 매년 300여 명이 철도사고로 사망할 정도로 많은 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이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즉 선진국들은 우리 보다 훨씬 전에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고, 그 사고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높은 안전문화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내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고를 모두 겪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후발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현재 발생하는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 안전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 번 사고를 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발생한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조직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사고 조사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이나 국과수 위주의 조사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안전전문가들 주도 하에 사고를 조사하여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설립돼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사안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것에서 대변되듯이 새 정부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관심의 대부분이 생활안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산업안전이나 교통안전 등에 대한 대책이 많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산업안전업무의 통합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안전 관련 법규나 대책이 각 행정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규제 내용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관련 내용만이라도 독립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